

-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올바른 추진방향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8. 8. 28.(화) 14:00
- 장 소: 온양관광호텔 아이비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8. 8. 28.(화) 14:00 ~ 16:30
- 장 소: 온양관광호텔 아이비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올바른 추진방향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지원팀장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등	안장현 부위원장
< 토 론 회 > ※ 좌장: 안장현 부위원장				
14:10	14:50	40′	주제 발표 ▶ 김주일/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 충남 노동정책의 현 주소 및 방향	
14:50	16:00	70′	지 정 토 론 ▶ 신동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권혁주/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부의장 ▶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본부장 ▶ 윤권중/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 최만정/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 김민호/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토론자 전체
16:00	16:25	25′	총 합 토 론	참여자 전체
16:25	16:30	05′	정리 및 폐회	좌장(안장현 부위원장)

목 차

■ 주제발표

- ☞ 충남 노동정책의 현주소 및 방향 03
김주일(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 지정토론

- ☞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청남도 노동정책 19
신동헌(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 충남의 노동정책 현황 23
권혁주(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부의장)
- ☞ 충남의 노동정책 현황 25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본부장)
- ☞ 충남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 27
윤권종(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 ☞ 일하는 노동정책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29
최만정(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 ☞ 충남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실행방안 31
김민호(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주제발표

충남 노동정책의 현주소 및 방향

김 주 일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충남 노동정책의 현주소 및 방향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김 주 일

충남 노동정책의 현주소 및 방향

2018. 8. 28

김주일 (충남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목 차

1. 충남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2. 충남노동정책의 근거규정 및 역할 논의
3. 노동정책의 내용
4. 6대 정책과제별 평가와 개선방향

1.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충남 노동정책의 배경 : 노동 및 산업경쟁력의 분석

- 일자리의 양은 상대적으로 양호 :

- 상대적으로 높은 GRDP 성장률과 높은 고용율, 낮은 청년 실업율로
- 충남 고용의 양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 2015-16년을 기점으로 일자리의 증가 및 성장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추세임.

- 그러나 일자리의 질은 문제임 :

- 삼성 및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 구조,
- 비정규직 및 불법파견(특히 서산 당진)의 증가,
- 산업안전 및 재해와 건강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해율의 격차 심화),
- 장시간 노동(임금총액 중 OT비중 최고),
- 노사갈등의 장기화(유성 및 갑을 등),
- 이주노동자 증가(천안-아산-당진-서산 벨트),
- 낮은 노조조직율(5-7%) 등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충남 노동의 사회책임보고서, 충남고용노동리포트 등의 실태 조사결과의 요약)

- 3 -

1.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기업에 인재가 오지 않는 악순환 :

-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재가 오지 않아 구인난을 겪음
(단가가 그 임금수준으로 맞추어져 있어 더 주기 어려움)
- 장기적으로 인재가 오지 않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도 어려움
(직업교육훈련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규 이후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남)
- 항상 수도권 다음의 이류 인재와 이류 기업, 이류 경쟁력으로 정착될 우려

- 장기적으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변화할 필요 :

- 노동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노동의 권익을 보호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 지역 인재의 탈 충남화가 방지되어 충남에 정착하게 되고
- 인재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인재를 찾아 기업이 유치되며,
-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및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어 다시 좋은 일자리가 정착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함

-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남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 :

-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에 지자체가 솔선수범하며 촉진역할을 수행하며
- 충남 도민의 인권차원에서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

- 4 -

1.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충남 노동정책의 발의

- 도지사와 노총의 정례모임인 노정협의회에서 노총 등 지자체 노동정책의 필요성 제기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 언급)
- 과거 도지사의 월례 노동세미나에서도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장기파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서 필요성 인식 (2014-15년)
- 2015년 6-7월 도지사의 월례노동세미나에서 서울시 노동정책의 사례 토론 이후 지자체의 노동정책 역할을 본격 모색하고 정책화할 것을 확정함.
- 이후 충남도 및 노총 모두가 서울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인식하고 충남에도 노동정책의 구체적 계획수립 필요성을 공유함.
- 평가 : 노사분쟁 해결에서 지자체 역할, 노동권익 보호에서 지자체 역할 일자리-노동 통합 거버넌스의 지자체 역할 등의 논의가 포괄되어 시작됨

- 5 -

1.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충남 노동정책의 경과

- 10차례의 실무위원회 개최

- 2015년 8월 31일 충남노동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 개최 이후 평균 월 2회 10차례의 회의 개최
- 구성 : 전문가(김주일, 유각근, 이원복), 노동특보(임승주), 민노총(방효훈), 한노총(한재필, 한영환), 도청(김현철, 허선무, 이찬원), 정무비서관(박병남) 등 11명으로 초안 작성 작업

-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 1차 토론회 : 실무위원 9명과 안수영, 김민호, 장재훈, 정완기, 노상철 등 5인의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 참석해 산업안전 및 소수자에 대한 정책 확장 논의
- 2차 토론회 : 실무위원 7명과 안수영, 장재훈, 정완기, 노상철, 이정숙, 김성자, 박수정, 남승일, 최애희, 김윤호 등 관련 전문가 23명 등 총 30명 참석하여 종합적으로 논의
- 3차 토론회 : 타운홀미팅 방식 노사민정 100인 토론회에서 분임토의

- 6 -

1.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충남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와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발족

- 노동정책 실무위원회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2016년 4월 25일 노사민정협의회에 안건상정하고, 6월 기본계획 발표를 제안하고 해체
- 이후 충남넷 도민의견 및 도청내 실과 의견 수렴('16. 5. 1 ~ 5. 30), 충남 노사민정 100인 토론회 ('16. 6.15), 실과 단위과제 취합 및 보완(7월)을 거치며 다소 지연됨.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정국에서 발표시기 지연
- 결국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는 2017년 1월 5일에 5년동안 48개 과제에 240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됨
- 2017년 7월 25일 노동정책협의회가 15명으로 발족함.

도 (당연직)	도의원	교육청	노동부	연구 기관	대학 교수	노동법 전문가	시민 단체	노동 단체	사용자 단 체
1명	1	1	1	1	2	2	2	2	2

- 7 -

1.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노동정책협의회의 운영

- 협치의 취지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이 담당
- 3회의 정기회의와 포럼(위촉, 사업의 이행평가, 정책방향 조정 등)
- 1회의 임시회의(도 의회의 예산 통과 문제의 대책회의)

- 노동정책의 실과 단위 수행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협의회의 논의 진행

- 도청의 각 실과에서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수행
- 그러나 2017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17년 1월 계획 발표)
- 2017년의 실과별 사업성과에 대한 잠정 사업평가 진행
- 가장 큰 문제는 도 의회에서 청소년인권센터와 노동권익센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직접수행 사유), 정책수행의 구심점이 없었다는 것임

- 8 -

2. 충남 노동정책의 근거 규정 및 역할 논의

▣ 노동법 상 지자체의 역할을 넘어서는 충남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

- 노동법 상의 지자체 역할은 매우 소극적 역할임

- 1) 노사관계발전법에 의거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지역 노사민정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역할,
- 2) 노조법에 의거하여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고 노사분쟁시 갈등해결을 위하여 조력할 수 있으며(49조), 쟁의행위를 접수하는 역할임.

-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충남의 경제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충남 노동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설계함.

- 1) 충남 지자체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여 수범사례를 제시함
- 2) 충남 지자체의 좋은 모범 사례를 민간에 확산시킴
- 3) 나아가 노동권익 보호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구심점 역할

- 9 -

2. 충남 노동정책의 근거 규정 및 역할 논의

▣ 충남 노동정책 조례의 근거

1) (지금은 폐지된) 충남 인권선언문 제 11조 노동에 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민은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와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2) 충남도 경제비전2030의 “2. 인재와 일자리 선순환환경 조성 2) 지역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경제비전의 보완 정책

3) 여성/소수자/인권 등 노동약자의 권리보호는 도정이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인권정책

- 10 -

2. 충남 노동정책의 근거 규정 및 역할 논의

▣ 충남 노동정책이 민관협치로 구현하는 지역사회 모습 : 역할 논의

- 충남 및 산하기관이 모범적으로 만드는 좋은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 기본권과 생활임금 등 기본 소득이 보장되며, 성과와 능력 이외의 요인으로 차별 받지 않으며 일한 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 공정노동이 실현되는 차별 없는 일터.
- 충남도의 모범적 관행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공공조달이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지역 일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노동교육과 노동상담이 가능하고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도 사회안전망과 노동복지를 누리고, 도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존중받는 노동존중의 일터와 삶터.
-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는 산업정책 혜택과 연계한 보상을 받아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계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11 -

2. 충남 노동정책의 근거 규정 및 역할 논의

▣ 충남 노동정책이 하고자 하는 일들 : 100인 토론회 2016. 6. 15

- **NO 차별, NO 갑질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 기업내 다양한 차별 해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갑질 해소
- **NO 빈곤, NO 불공정 :**
땀 흘려 일하는 빈곤계층 해소,
동일노동 차별임금 등의 불공정 노동시장 관행 해소,
일자리 및 교육기회의 불공정 배분 해소
- **NO 재해, NO 사고 :**
안전제이의 노동환경과 노동재해 해소,
근로자 건강권 구축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 해소,
감정노동, 심리치유 등의 보호

- 12 -

2. 충남 노동정책의 근거 규정 및 역할 논의

■ 충남 노동정책의 방향 수립 - 기본계획

○ 충남 노동정책의 핵심가치 실현

- 노동가치가 존중되고 차별이 없고 안전하며 쾌적한 일터를 지향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충남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 「충남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립, 시행, 평가
-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 * (행정) 일자리노동정책과 신설 및 (협치) 노동정책협의회 운영 등
 - * (사무국) 충남노동권익센터 설립, 운영

○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 정립 및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 고용안정, 생활안정, 균등대우 등 모범사용자로서의 정책 추진
- 민간위탁업체, 관급공사, 민간과 협약(MOU) 체결 및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한 민간부문으로 확산

○ 충남지역 노동여건을 반영한 노동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익 보호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구심점 역할

- 13 -

3. 노동정책 내용: 3대 정책목표 6대 정책과제 18개 정책분야

정책
비전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3 대
정 책
목 표

노동권익 존중

노동가치 실현
(모범사용자 역할)

노동환경 조성

6 대
정 책
과 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
권 보장

노동존중의
사 용 자

삶의 질
개 선

고용환경
개 선

사회적
협력

18개
정 책
분 야

① 여성
② 청소년
③ 고령자
④ 이주 노동자
⑤ 장애인

⑥ 노동교육
⑦ 노동상담
⑧ 안전한 노동환경

⑨ 노사관계
⑩ 노동행정

⑪ 고용안정
⑫ 생활안정
⑬ 균등대우

⑭ 노동시장 개선
⑮ 소득불평 등 해소
⑯ 영세 사업장개선

⑰ 노사갈등 해결
⑱ 지역사회 네트워크

- 14 -

3. 노동정책 내용: 6대 정책과제 18개 정책분야 50개 단위과제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정책 분야	단 위 과 제 (2017년 버전)
노동 권익 보호	취약 근로자 권익보 호	1. 여 성	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② 직장맘 지원서비스의 확대
		2. 청소년	③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④ 청소년 고용사업주 의식전환
		3. 고령자	⑤ 고령자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 보호
		4. 이 주 노동자	⑥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⑦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치 확대 ⑧ 이주노동자 복지 지원 강화
		5. 장애인	⑨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⑩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동 기본권 보장	6. 노동교육	⑪ 근로자 노동교육 ⑫ 공무원 노동교육 ⑬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7. 노동상담	⑭ 명예노동음부즈만 운영 ⑮ 노동상담소 운영 활성화 ⑯ 충남 노동권익센터 설립
		8. 안전한 노동환경	⑰ 건강관리 체계 구축 ⑱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⑲ 산업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 ⑳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 15 -

3. 노동정책 내용: 6대 정책과제 18개 정책분야 50개 단위과제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정책 분야	단 위 과 제
노동 존중의 사용자 역할	노동 존중의 사용자	9. 노사관계	㉑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㉒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10. 노동행정	㉓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㉔ 노동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㉕ 시군 노동행정 지원 ㉖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삶의 질 개선	11. 고용안정	㉗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2. 생활안정	(29)생활임금제 실시 ㉙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 ㉚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㉛ 노동시간 단축모델 구축
		13. 균등대우	㉜ 차별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㉝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㉞ 민간위탁 노무진단/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인프라 조성	고용 환경 개선	14. 노동시장 개선	㉞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㉟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직접고용 유도 ㊱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㊲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15. 소득불평등 해소	㊳ 기초고용질서 확립 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기반 구축 ㊵ 적극적 노동복지
		16. 영세사업장 개선	㊶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㊷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교육 ㊸ 특수고용직 처우개선
	사회적 협력	17. 노사갈등 해결	㊹ 노사갈등 이해당사자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18. 지역사회 네트워크	㊺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㊻ 노정협의회 운영 ㊼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㊽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 16 -

3. 노동정책 내용 : 노동정책협의회

■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근거

- 근거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를 설치한다.
- 운영
 - 정기회(연2회), 임시회(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주요기능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분 야	소속기관(직위)
노동단체 (2명)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국장)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국장)
시민단체(2명)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안YWCA(사무총장)
사용자단체 (2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이사) 사)충남도 중소기업연합회(사무국장)
대학교수 (2명)	관내 대학교
노동법률 전문가(2명)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도 의 원 (1명)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연 구 원 (1명)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정부기관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장)
도교육청 (1명)	충남교육청(미래인재과장)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 내용 : 여성, 청소년, 어르신, 이주노동자,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직장맘지원서비스(직장맘대디지원센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청소년노동인권보호(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 및 사업주 노동인권교육,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의 역량강화, 지원센터 및 건강권 보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등의 사업임
- 자체 평가 및 개선방향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충남의 인센티브 발굴노력,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의 추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도의회 민간위탁 재상정, 청소년을 고용의 실태 확인 필요, 이주노동자 쉼터의 프로그램과 예산 등 점검 필요, 도내 의료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향 등 논의
- 총평
 - 청소년노동인권보호는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을 통하여 의회 통과가 필요
 - 일자리 노동정책과의 사업이 아니어서 노동정책과 연계되지 못하여 진행(노동정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력과 협업 필요)
 - 취약계층 권익보호는 노인,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와 연계되어 진행 필요
 - 정책의 아이টে이 현재 담당 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개선 수준임(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방향 조정이 필요)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2) 노동기본권 보장

- 내용 : 노동교육, 노동상담, 안전한 노동환경의 영역으로, 노동교육은 노동자, 공무원, 고용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상담은 노동옴부즈만 운영과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상담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은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공사장 산업안전 매뉴얼 및 교육, 산업안전 우수기업 시상 등의 사업임
- 자체 평가 및 개선방향 : 노동자 노동교육의 수요 확대 필요, 공무원 노동교육의 의무화 조례 규정 등 필요, 옴부즈만(상담) -권리구제 -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프로세스 필요, 근로자건강센터의 프로그램 개선 필요,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 및 협업 필요, 산업안전우수기업 선정과 지표개발의 어려움
- 총평
 - 노동권익센터예산의 의회 미통과로 사업이 담보 혹은 분야별 파편적으로 진행 (노동기본권의 교육 및 상담은 센터라는 구심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정책적 접근의 한계(중앙정부와 협업, 부처간 협력 등)
 - 감정노동을 위한 일정한 사업의 성과는 향후 조례로 추진 가능함
 - 노동상담 - 권리구제 - 컨설팅 - 노동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운영이 필요 (서울시는 이의 형식적 운영으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

- 19 -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3) 노동존중의 사용자

- 내용 : 충남지자체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및 노동 행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노사관계를 위한 노사문화 구축,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발족 및 운영, 노동정책의 조례 제정, 노동정책 성과지표 개발, 시군 노동행정 지원 등의 세부 정책임
- 자체 평가 및 개선방향 : 공공부문 노사관계(단체교섭 등) 관련은 일자리노동 정책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협력이 필요,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는 설립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차원이 아닌 노동정책의 평가 및 방향 조정을 위한 지표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고, 워크숍 만이 아닌 시군의 노동행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
- 총평
 - 노동정책의 조례가 통과되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근거를 구축함
 - 그러나 노동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중층적으로 활성화할 필요 있음
 - 장기적으로 노동정책을 조율 및 평가할 지표와 체계의 고민이 시작될 필요
 - 충남도 만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노동정책 혹은 일자리정책의 구축 지원 필요

- 20 -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4) 삶의 질 개선

- 내용 : 충남지자체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구체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생활안정, 균등대우의 세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 고용안정의 차원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생활안정의 차원에서는 생활임금제, 체불없는 관급공사,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보급을, 균등대우의 차원에서는 차별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민간위탁업체 및 사회적기업 근로환경 개선이 세부과제임
- 자체 평가 및 개선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은 민간위탁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정책협의회나 일자리노동정책과의 협력 및 공유 필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지정책과의 협력 및 공유 필요, 생활임금제의 실효성 제고 노력, 관급공사 체불상황의 적극적 체크 필요, 다양한 취약계층의 휴게시설 파악 필요, 노동시간 단축모델과 보조금 확산 필요, 고충처리 활성화노력, 민간위탁업체 컨설팅 필요 등 대체로 사업의 시작단계임.
- 총평
 - 노동권익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여 산발적 사업으로 진행
 - 일자리노동정책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협력이나 정보의 공유가 미흡
 - 다양한 중앙부처의 사업이나 정책을 노동정책에서 모아내고 실현할 방안 필요

- 21 -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5) 고용환경 개선

- 내용 : 고용환경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소득불평등 해소, 영세사업장 개선의 세가지 정책분야에서 진행됨. 노동시장 개선은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불법파견의 직접고용 유도,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등 불법파견 등의 고용질서를 개선하는 사업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적극적 노동복지 등의 정책임. 영세사업장 개선은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 노동인식 개선 등의 사업임
- 자체 평가 및 개선방향 : 고용환경의 개선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는 다양한 사업부서나 위탁업체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임. 특히 파견업체와 관련된 고용서비스 분야는 지자체 및 민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함.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면 구체적 정책 로드맵을 설정하여 진행되어야 함.
- 총평
 -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풀어나갈 정책과제로 노동권익센터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 사업을 전개해야 함
 - 적극적 노동복지의 개념과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책 및 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한 정책과제임

- 22 -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6) 사회적 협력

- 내용 : 사회적 협력은 노사갈등 해결의 역량 및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협의회, 노정협의회,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의 정책이 있음
- 자체 평가 및 개선방향 :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노사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충남 노사분규 조정중재단을 설립함. 그러나 지역의 신뢰를 쌓기 위하여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채널로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필요하며, 노동정책협의회는 협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함.
- 총평
 -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협의회, 노정협의회 등 중층적 소통의 채널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지역 주체의 의지가 필요함
 - 노사분규 조정중재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지역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충남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함

- 23 -

4. 6대 정책과제 별 평가와 개선방향 : 장애요인과 극복

▣ 효과적 충남노동정책 실현의 장애요인과 극복

- 중앙부처와 지자체 부서의 칸막이로 정보공유와 유기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체계적 노동정책이 깔때기가 되어 다양한 부처정책을 모아서 결합하도록 함. 노동정책의 추진 거버넌스와 노동권익센터의 팀웍과 인적 구성이 핵심임.
- 노동정책 실현의 구심점인 충남 노동권익센터(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포함)의 부재로 파편적 산발적 사업이 되고 있음. 노동권익센터의 조직구성을 통하여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여 추진함(서울 노동권익센터의 사례 참조)
- 노동정책의 실현 메커니즘으로서 협치의 인식부족(노사정과 전문가 등)으로 인하여 소통의 주인의식이 아닌 자문자/요청-시혜/방관 등의 역할에 머무름. 노동정책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중층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마당(포럼)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 그래야 정책의 평가와 조정, 이후 계획 수립이 가능함
- 노동정책의 조례 및 협의회로 하드웨어(H/W)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이를 운영할 예산, 조직, 사람 등의 운영체제(S/W)를 의회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구축하여야 함.

- 24 -



지정토론

- ☞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청남도 노동정책** 19
신동헌(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 **충남의 노동정책 현황** 23
권혁주(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부의장)

- ☞ **충남의 노동정책 현황** 25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본부장)

- ☞ **충남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 27
윤권종(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 ☞ **일하는 노동정책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29
최만정(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 ☞ **충남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실행방안** 31
김민호(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청남도 노동정책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신 동 현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해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1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전체계

정 책 비 전

「차별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 책 목 표

노동권익 존중, 노동가치 실현, 노동환경 개선



① 2017년 추진결과

□ 노동정책 추진 원년으로 이행기반 마련에 중점

-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017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조례 제정)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자문 기구 구성) 노동정책협의회 위촉(위원장 : 한기대 김주일교수)
- (민간 협업) 노동정책포럼 개최,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 2017년은 노동정책 시행계획 원년으로, 향후 5년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데 집중

② 2018년 추진현황

□ 본격적인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 이행으로 노동존중 사회문화 조성

-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노동정책포럼(노동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17년도 과제 평가 및 '18년 시행계획 수립(2018. 4. 2.)
- (중간지원조직 설립)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2018. 9. 이후)
-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마련)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충남서북부 근로자 건강지원센터 유치(안전보건관리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유치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중소기업사업장 지원)
 - 노동권익보호관 제도 운영 확대로 무료노동상담, 노동교육, 영세사업장 노무 컨설팅 추진
 - 도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쉼터 등) 확대 운영

○ (노동존중 문화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행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2018년 생활임금 8,935원, 본청 + 출자출연기관 적용, 민간위탁 및 민간부문 확대적용 방안 모색)
- 합리적 노사관계 운영과 노동자 참여 존중(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노사협의회 정례화, 도-시군 인사담당자-충남지역노조 간담회 추진)

○ (노동 환경 개선)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일·생활균형실현 공동선언 및 문화확산을 위한 실천협약 추진
 - 4.2 노사민정 공동선언, 사업장 실천협약 추진(20개), 문화확산 지역실천단 운영
-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확대(5개부문 28개 세부사업 추진)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사업 추진
-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도모

○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 조례 전면 개정으로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노동관련 의제별 토론의 일상화 추진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인상 등 노동현안과제 포럼 진행 (10월중)
- 고용노동컨퍼런스(충남컨퍼런스 100인 토론회 추진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역할 10월중)
- 노정협의회 운영(한국노총 9.19, 민주노총 10.31. 정책간담회 추진, 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화 관련 노정간담회, 노사정 간담회 진행)

⇒ 2018년 하반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과 중간지원조직(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지역노동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3 2019년 추진계획

□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반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 노동정책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구현 기반 확대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7대 핵심노동정책 추진
- 충남 사회적대화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해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3

협조요청사항

- 노동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그리고 도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의 노동정책 현황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부의장

권혁주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충남의 노동정책 현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본부장

남 용 민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충남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

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윤 권 중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이 다양화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되면서 고용불안정,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 및 복지혜택 차별 대우 등의 문제점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또는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러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이라고 한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말한다.

2006년 비정규직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2017년 6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쟁점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정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구성원인 시민의 고용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기준 고용률은 충남 64.1%, 전국 61.4%로 충남이 전국 평균 보다는 높다, 실업률은 충남 2.6%, 전국 3.2%이며 전국비율 보다는 다소 낮다. 또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충남 31.6%, 전국 32.7%로 전국의 비율 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

충남의 노동자 노동환경의 개선과 삶에 질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임금 및 고용환경의 불안정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자의 욕구와 가치관의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① 처우와 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
- ② 일용직과 임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 ③ 제도적으로 노동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행동 제고를 위한 소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① 노동자에 대한 권한과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
- ②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개선과 제도적 소통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규제강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섯째, 단체교섭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일하는 노동정책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최 만 정

1. 충남노동정책협의회 위상과 사업방향

- 1) 조례 - 도지사 심의 자문기구 :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
- 2)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충남도내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단기 과제를 설정해야
- 3) 협의회 산하, 또는 협의회 협력체로써 충남도내 주요 노동정책 집행 실무그룹을 두어야
- 4) 실무그룹은 공무원, 직영, 위탁을 망라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 실무자로 구성하여 정책방향과 집행과제를 공유, 점검, 실행, 피드백을 담당하여야
- 이른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거버넌스와 중간조직) 실무그룹 : 공무원 관련팀, 노사민정, 노동계 실무, 노동정책 추진 중간지원조직 등

2.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몇 가지 현실 과제

- 1) 근로자를 노동자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야 : 조례 뿐 아니라 일상 문서에 이르기까지 노동존중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출발임.
- 2) 충남도와 산하 지자체가 모범 사용자로써 기능하기 위해 - 이미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핵심임.

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뿐 아니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 해소,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등 이행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권리 증진 노력 : 생활임금제가 조례에만 머물고 있는가? 민간부문 최저임금 공방이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목표 실현 계획은? 도청등 행정관청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예산을 세우는가?

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는 문제 :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서울 이외에 충남이 노동정책에서 앞서간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실현된 부분은 없다.

3. 민간부문까지 노동권리 확대를 위한 몇가지 과제

가. 작년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는 부결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도의회 구성에서 집행부의지를 관철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나. 충청남도 집행부가 바뀐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는가?

충남비정규직 지원센터 혹은 충남노동권익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충남노동교육문화기관, 충남서북부근로자건강센터, 감정노동자보호 가이드라인, 노사갈등 조정중재단 시도, 노동계와 정례적 간담회 등

다. 직업상담소 관련 규정에 따른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 의지, 단속은 진행되고 있는가?

충남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실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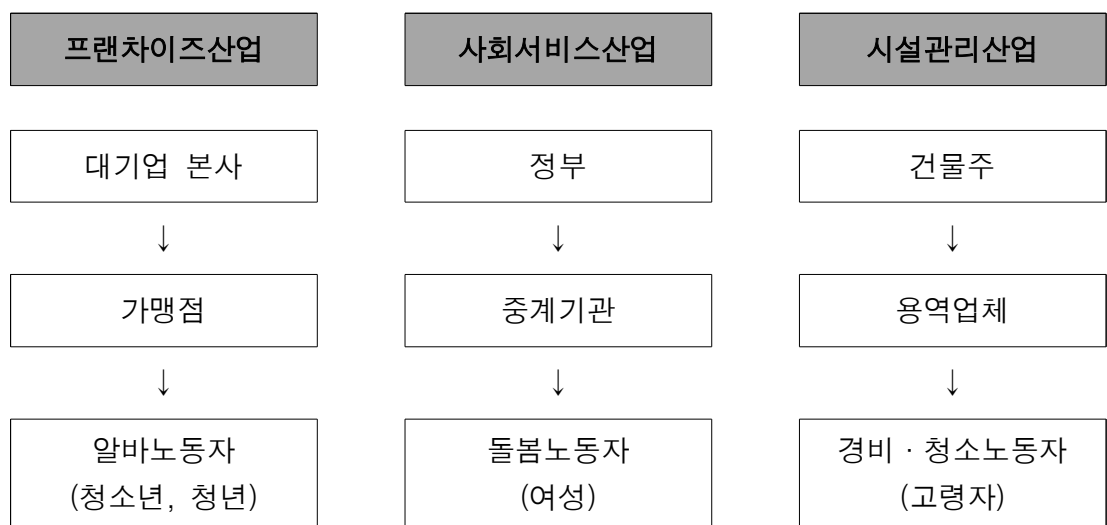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김 민 호¹⁾

1. 충남 노동의 현황 관련

- 노동자 및 산업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중심의 프랜차이즈산업(알바노동), 사회서비스산업(돌봄노동), 시설관리산업(경비·청소노동) 등 ‘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음.
- 이들 취약계층 일자리는 공통적으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체제’를 심화시키는 ‘외주화 구조’를 띠고 있음.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 남성 중심의 제조업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은 충남 노동의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취약계층 일자리의 외주화 구조〉



1)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공인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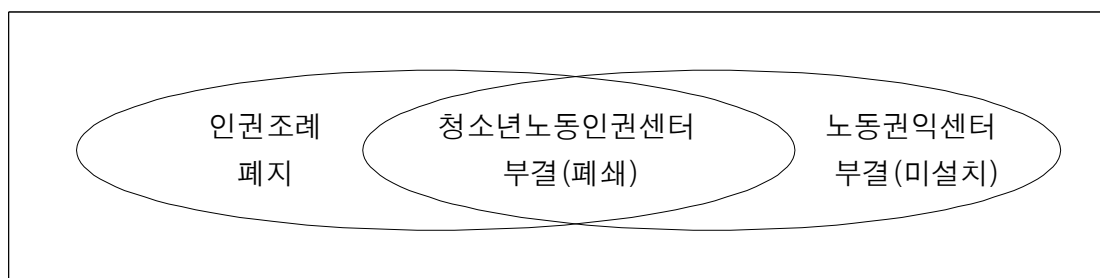
2. 지자체의 '모범사용자 역할' 관련

- 생활임금조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계획이 필요함.
 - 생활임금 1만원 이상으로
 - 용역업체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예 : 국회)
 - 공무원과 동일·유사업무 비정규노동자의 공무원 전환 (예 : 우정사업본부)

3. 적폐청산을 통한 충남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실행방안 확보 필요

- 2017년 도의회는 정작 앞서 본 '모범사용자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민관 협치(노동계와 지자체, 전문성·현장성과 행정력)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충남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민간위탁) 예산안을 '도가 직접 운영'하라는 이유로 모두 부결시켰음.
- 부결로 인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 6개월 만에 폐쇄되었고, 노동권익센터는 아직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인권조례 폐지'와 더불어 과거 지방의회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써 현재 '노동'과 '인권' 분야에 있어서 도의 주요 실행방안은 모두 차단됨.

〈2017년 도의회의 노동·인권 분야의 적폐 사례〉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확인된 준엄한 촛불민심으로 도의회의 정치지형이 새롭게 재편되었고, 최근 들어 폐지된 ‘인권조례 재 제정’에 나서면서 기존보다 더 나아가 ‘인권센터 운영·활동의 독립성 보장’ 및 ‘도민인권보호관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는 적폐청산이 빠르게 진행 中
- ‘노동’ 분야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설치’ 및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충남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4. 충남노동정책협의회

- 수립된 노동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협의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노동정책 실행방안 협의·추진 → 실행기구 지원·피드백 → 협의회 보고> 및 <연구>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보완·추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

〈소위원회를 통한 노동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

소위원회 형태	주제별 소위 : 고용, 임금, 산재, 노동조합, 노동교육, 노동상담 등 대상별 소위 : 여성, 청소년, 청년,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소위원회 구성	협의회 위원 약간 명 관계공무원, 연구자, 전문가, 노동단체 등
소위원회 기능	① 노동정책 실행방안 협의·추진 ② 실행기구(관계부서, 전담기구 등)에 대한 지원·피드백 ③ 협의회에 보고 → 협의회 평가 → ① ※ 연구모임 운영 : 심화연구를 통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보완

※ 소위원회 연구모임 : 의원, 공무원, 연구자, 전문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

제 회 모